

“금리 인하시 주택가격 상승… 물가보다 ‘금융안정’ 먼저”

한은, 기준금리 12차례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공요금·환율·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 많아 금리인하 불확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3.5%)를 이번에도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뒤 12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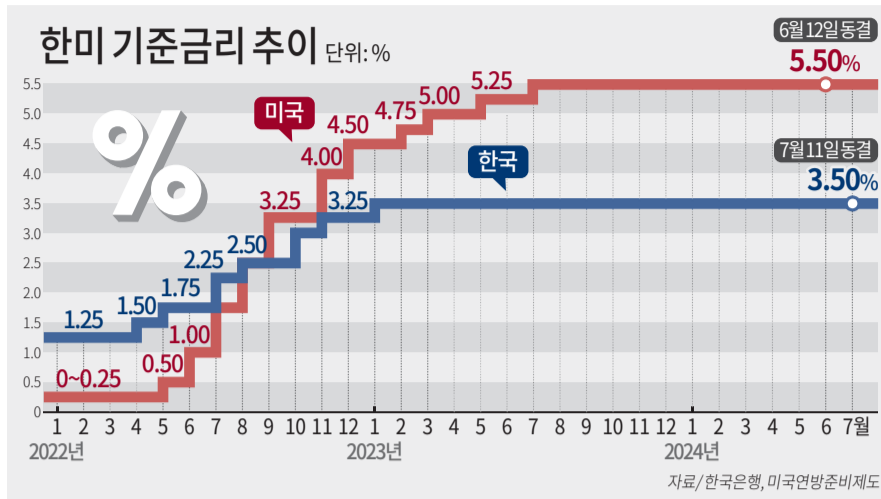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위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언제 방향을 전환할 지 여부는 위험요인이 많아 불확실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물가가 2%대로 둔화해 금리 인하시기를 논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고, 금리인하시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금리인하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 금리동결, 물가보다 ‘금융안정’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공공요금인상 ▲환율 ▲국제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반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높은 체감물가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1년간 동결했다. 오는 8월 가스요금이 오르고 10월 이후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9원 하락한 1381.9원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높아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달에는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종합 매매 가격은 4월 -0.01%에서 5월 0.02%로 상승 전환했고, 서울은

같은 기간 0.09%에서 0.1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낮아진 시장금리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상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낮아진 대출금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져 유심히 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더라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 10월 금리인하 전망

이번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6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2명은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통화위원 중 1명은 지난 2월부터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금리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이 확대돼 금리인하의 지지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지금까지 동결을 유지한 데는 미국 통화정책 영향도 있었다고 본다”며 “연준의 9월 금리인하를 확인한 이후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 때문에 연내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들쭉이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10월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60년 정부 부채 3배로 늘어날 수도”

OECD 한국경제보고서

현재 GDP대비 부채 50% 안팎 수준
구조개혁 없다면 35년 후 150%로
중소 생산성 향상, 성장동력 키워야

한국이 현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할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5년쯤 후 1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의 1/4, 미국의 1/2 수준을 보이는 등 주요국에 비해 꽤 낮다. 아직은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양호한 수치 유지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구의 빠른 고령화 여파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0%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OECD 평균은 100%를 넘어섰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등이 100%대를 나타냈다. 이탈리아는 150%에 근접했고 일본의 해당 비율은 200%를 훌쩍 넘어 250%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 등이 미진할 시 향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OECD는 “공공 재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없다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오는 2060년까지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수준인 50%의 3배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세 가지 권고를 제시했다. 우선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이 비율은 2060년에 110% 내외로, 여기에 정년연장 조치가 더해지면 7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이 둘에 청년·여성·외국인

고용 확대까지 더해지면 60%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고숙련 외국인력의 이민 촉진 등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학생과 기업가, 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 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문턱도 낮출 것을 제안했다.

한국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공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초래해왔다고 OECD는 평가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졸업제도’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내 90일 체류 외국인수 16% 늘었다

통계청, 2023 국제인구이동통계
입국 외국인 3분의1은 ‘취업목적’
입국자 수 15%, 출국자 11%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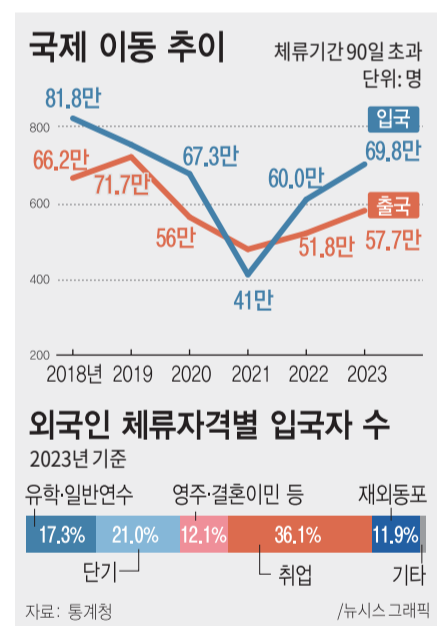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수가 전년대비 16% 넘게 증가했다. 이들 중 1/3 이상은 취업 목적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제이동자는 127만6000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5만1000명(13.5%) 늘어났다. 국제이동자는 입출국한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이동자에 국한한다.

입국자 수는 69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2000명(15.2%) 늘었다. 출국자 수는 57만7000명으로 5만9000명(11.4%) 늘었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은 전년대비 3만3000명 늘어 12만1000명 순유입됐다. 국제순이동은 지난 2022년 순유입으로 전환 후 2년째 이어졌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2년 연속 출국보다 입국이 많았다. 순이동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외국인 순유입은 전년대비 8000명 감소 16만1000명이다. 외국인 입국자는 48만명으로 2022년보다 6만7000명(16.2%) 증가했다. 출국자는 31만9000명으로 7만5000명(30.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로 출국자의 증가폭이 컸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외국인의 순유입의 경우, 입국과 출국이 모두 늘었다”며 “입국은 재외동포 취업이나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출국에 대해선 “지난 2022년 입국자가 늘어난 이후 지난해 자진 출국이나 불법체류자 특별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3명 중 1명 이상이 취업(36.1%)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 입국자는 전년대비 3만5000명(25.5%) 늘어난 17만3000명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어 단기(21.0%), 유학·일반연수(17.3%), 영주·결혼이민(12.1%) 순으로 많았다. 단기입국자(10만1000명), 영주·결혼이민(5만8000명)은 전년대비 각각 1만2000명, 6000명 늘었다. 이에 반해,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8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6000명(-6.7%) 감소했다. 유학만 놓고 보면 9000명(-16.6%) 줄었다.

온 팀장은 “2022년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유학과 일반연수의 수치가 크게 늘었다”며 “그로 인해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尹, 체코·스웨덴 등 4개국과 신규원전 논의

>> 1면 ‘韓日 정상, 러·북 군사…’서 계속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 외에도 독일·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나토 순방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안보 협력에 중점을 뒀지만, 릴레이 양자회담에서는 원전, 방산, 디지털 등 우리 기업들의 상대국 진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준섭 경제수석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현지 브리핑에서 체코·네덜란드·스

웨덴·핀란드 등 4개국과의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 쾌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련 기업과 함께 ‘딴 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박 수석은 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 신규 원전과 관련해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며 “네덜란드는 1기, 핀란드는 5기, 스웨덴은 6기의 원전을 현재 운영 중이며, 윤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간에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공공망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서예진 기자 syj@